

# 말라카해협 해적활동 민관 공동대응키로

## 해협통과시 해적당직·선박보안체제 강화

해양수산부는 말라카해협의 해적출몰 및 해상테러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해양부는 지난 3월22일 중동지역 운항선사 5개사와 선주협회 등 관련단체, 해경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말라카해협에서의 해적출몰 및 해상테러에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선박이 말라카해협을 통과할때(약 2일 소요) 해적당직을 실시해 해적출몰시 신속히 대응하고 선박보안체제(IPSC 보안 2등급 수준 당분간 유지)를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

또 통항선박에 대해선 선박보안경보시스템(SSAS) 단말기를 조기 탑재해 유사시 가동토록 했으며 일부 대형선사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위치추적시스템(VMS)을 통한 선박위치 모니터링체제를 통항선박을 보유한 국적선사에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말라카해협의 특성을 감안,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 경비와 순찰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데 뜻을 같이 하고 인근 연안국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유사시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난해 11월 체결돼 올해말 발효를 앞두고 있는 아시아지역해적방지협정(ReCAAP) 체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말라카해협에선 지난해 총 37건의 해적사건이 발생했다. 올해어서는 지난 3월12일 인도네시아 가스운반선 '트리 사무드라호'(1289톤)와 14일 일본 예인선 '이다텐호'(323톤)가 연이어 무장해적

들의 공격을 받아 선원들이 납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테러조직과 연계해 해협을 봉쇄하려는 대형테러의 경고도 계속 나오고 있다.

### 올해말부터 지문인식 선원신분증 발급

#### 해양부, ILO 선원증명서협약 비준추진

해양수산부는 모든 외항선박의 선원에게 생체인식정보(지문)가 수록된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2003년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이 지난 2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올해말부터 우리나라 외항선원에게 선원신분증명서가 발급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선원들이 외국항만에 상륙 및 통과를 할때 최단기간내에 허가를 얻는 등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은 물론 국제기준에 부합된 증서를 소지함으로써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2001년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9.11 테러사건 이후 선박 및 각국 항만의 보안강화를 위해 2003년 6월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다. 이후 프랑스, 요르단, 나이지리아 등이 협약을 비준해 지난 2월 발효됐으며 중국, 미얀마, 필리핀 및 EU회원국 등도 비준을 추진 중에 있다.

해양부는 최근 이 협약에 의한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의 근거를 선원법에 반영(3월말 공포 예정)하고, 구체적인 발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선원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과 협약 비준을 위한 세부절차를 진행중이다.